



성과연봉제 폐기하라

박근혜 구속 이후
투쟁해야
정권 교체도 의미 있다

3면

세월호
인양에서도
불신받는 정부

8면

대선 후보
노동·일자리
공약 비교

4~5면

프랑스 국민전선
프랑스에 드리운
나치의 위험

7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브렉시트와 영국
자본주의의 미래

7면

수서 KTX 개통 1백 일
경쟁을 핑계로
임금 삭감,
외주화 확대 중

6면

성과연봉제 폐지하라
국민연금 개악 시도 비판

2면



민주당에 의존하지 말고 투쟁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김종현

성과연봉제 폐지하라

강동훈

지난해에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상당수 공공기관들은 근로기준법도 어긴 채 노사합의도 없이 이 사회를 개척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정부는 '노조 동의가 없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강변해 왔지만, 올해 초 대전지법은 철도노조 등 5개 공공기관 노조가 제기한 성과연봉제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정부가 억지를 부리고 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은 지난 3월 9일에 열린 '2017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성과연봉제는 공공기관의 실질적 생산성 제고와 공공서

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올바른 정책"이라며 '성과연봉제 차질 없는 시행'을 강조했다.

그러나 황교안이 말하는 "생산성 제고"는 공공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동안 정부는 악명 높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공공기관들이 수익성을 중시하고 비용 절감을 추구하도록 유도해 왔다. 성과연봉제와 저성장과 퇴출제는 노동자 개개인에게 이와 같은 압박을 더한층 가할 것이고, 그리 되면 공공부문의 공적 기능은 더 악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성과 평가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고용이 연동되도록 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줄 게 뻔하다. 이는 '고과연봉제'라는 이름으로 성과연봉제가 시행되고 있는 KT의 사례에서 이

미 드러난 바 있다.

일정 비율이 정해져 있는 인사사고와 등급으로 임금을 결정하게 되자, 고과를 주는 팀장, 지사장 등 관리자의 권한은 무소불위처럼 됐다. 살인적인 실적 경쟁에 내몰린 직원들이 해마다 수십 명씩 각종 돌연사와 질환, 자살 등으로 죽어 가며 KT는 '죽음의 기업'이 됐다. 2013년 한 해에만 직원 25명이 사망했고, 이 중 8명이 자살했다.

따라서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지키고,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지키는 정당한 투쟁이다.

또한 성과연봉제 폐지 투쟁은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는 "모범"을 보여 이를 민간에도 확대하려 한다. 경제 위기 속에서 임금을 줄이고 노동 시장을 더 유연화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과연봉제 저지뿐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영화 중단과 재공영화 등 공공서비스

확대로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자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야말로 임금과 고용을 늘리는 진정한 대안이다.

대선 공약

한편, 대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들이 대부분 정부의 일방적 성과연봉제 추진 방식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공조해 성과연봉제를 폐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노동운동 내에 적지 않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성과연봉제 폐지를 내세운다. 지난해에도 성과연봉제 반대 원칙을 분명히 밝히며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에 지지를 보낸 바 있다.

반면 부르주아 야당들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은 3월 18일에 열린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공노총) 출범식에서 "노사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성과연봉제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어정쩡한 입장을 취했다. 사회자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다시 분명히 약속드리겠다"며 '성과연봉제 즉각 폐지'를 선언했지만 말이다.

지난해에 민주당은 '성과연봉제 일방적 강행 반대'라도 당론으로 채택하라는 공공부문 노조들의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당 대표 추미애와 원내대표 우상호도 성과연봉제에 대해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거나 '문제제기와 개선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모호한 결론만 내놓은 바 있다.

근본적으로 민주당 같은 부르주아 정당들은 노동자들을 쥐어짜 이윤을 키우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지한다. 그래서 성과연봉제 같은 정책에 반대할 때도 일관되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경제 위기와 사회 양극화 극복을 위해 기업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모두 양보하자고 한다.

그러므로 민주당에 의존하지 말고 노동자들이 투쟁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박근혜 퇴진으로 노동자들의 사기가 높아진 것을 이용해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공공부문 조직 노동자들의 강력한 힘을 노동 개악 저지에 사용해야, 광범한 지지를 받고 공공부문과 그 노동조건을 지켜 낼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연장안 논란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렛대로 국민연금도 개악하려는 정부

지난 2월 23일 국민연금연구원은 연금재정 악화를 이유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만 67세로 늦추고, 보험료 납부도 64세까지 연장하자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마디로 보험료는 더 오래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으라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약 50퍼센트)과 자살률(10만 명 당 58.6명) 모두 OECD 1위인 현실에서 말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삽시간에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국민연금이 아니라 사망연금이다", "연금 받기 전에 굶어 죽을 듯", "삼심물산 합병에 찬성해 손실 난 피해를 왜 수급자들이 입어야 하나".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은 당일 오후 추가 자료를 통해 "연구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해야 했다.

그러나 이토록 민감한 문제를 국책연구기관이 사전 검토와 논의도 없이 '정책과제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을 리 없다. 그것도 현재의 박근혜 탄핵 논

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시점에 말이다. 정부는 2018년 8월(예상) '국민연금 종합운영 개선방안' 발표를 목표로, 올해 4월부터 '재정계산 위원회'(4차 재정계산)를 구성해 재정 전망과 제도 개선 등의 논의에 들어간다. 이미 2008년(2차)과 2013년(3차) 재정계산 때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는 제4차 재정계산에서 검토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과거 국민연금 개악이 10년 주기(1998년과 2007년으로, 모두 민주당 정권 시절)로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번에 다시 연금 개악을 위한 사전 정치작업에 들어간 듯하다.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군불 때기를 하려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와 기금 고갈 위험(재정 안정화 필요) 논리를 내세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개악해 왔다. 더불어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박탈감을 악용해 상대적으로 나은 공무원연

금을 공격하고, 그 뒤 다시 국민연금을 개악하는 술책을 부려 왔다.

그래서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 공격을 할 때 <노동자 연대>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잘 막아야 이런 악순환을 끊고 국민연금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이 개악되고 나면 이후에 국민연금 개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당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 의지는 매우 단호했으나,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 노동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그런데 개혁주의 지도자들(특히,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을 주도하는)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삭감을 수용하는 대신 그만큼 국민연금을 인상하는 '개혁'을 추구했다. 이는 완전히 공상적인 프로젝트였다. 실제 현실에서는 연금 정책을 두고 투쟁을 벌이는 두 세력 중 누구도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할 이해관계도 의지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인상은커녕 추가 개악과 더

폭넓은 임금체계 개악을 염두에 두고 공무원연금을 공격했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은 연금 삭감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연금 삭감도 문제지만 이 전투에서 패배하면 더한층의 공격이 들어올 게 뻔한 상황이었다.

이런 세력 관계를 고려해야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수용하면 공적연금 강화는커녕 개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뿐이다.

세력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런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논의'라는 미끼를 던지며 공무원연금 개악안 합의를 종용했다. 당시 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충재가 독단적으로 이 합의안을 받아들였고, 개혁주의 지도자들도 이를 지지했다. 당시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은 당연히 이 합의안에 반대했다. 공무원노조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았다. 그럼에도 지도자들의 배신과 양보를 뛰어넘지는 못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주저앉힌 뒤 사회적 기구는 지리멸렬하게 논의를 이어 가다 종료됐다. 애당초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도 국민연금 상향에 진지하지 않았다.

이번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연장안 논란도 당시 <노동자 연대>의 입장이 옳았음을 보여 준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합의안을 지지한 지도자들은 당시의 교훈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뼈아픈 성찰을 하는 것이 양식 있는 행동일 것이다. 공상적 대안으로 노동자들에게 양보하라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건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단호하게 이끄는 것이 진정 책임있는 자세일 것이다. 노동계급 전체의 이익을 위해 단호하게 싸워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을 쟁취할 유일한 방법이다.

신정환

박근혜 구속 이후

투쟁해야 정권교체도 의미있다

김문성

박근혜가 파면 3주 만에 구속되는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은 제증이 확 가시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서울 구치소에는 박근혜 말고도 그동안 증오의 표적이 된 박근혜 측근들이 몇몇 있다.

박근혜가 임기 동안 가장 애써서 지키려 했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살맛난다. 박근혜는 다른 누구보다 기업주들의 이익을 지키려 온몸을 던졌다.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그는 노동자들의 임금 수령을 마치 도둑질인 양 취급했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요구하는 청년들에게 중동이나 가라고 모욕했다. 많은 여성들을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로 내몰았고, 애 낳는 도구 취급했다.

보통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기업주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살육을 마다하지 않았던 군사 독재자들을 국가적 영웅으로 만들려 했다. 자기 애비 때문에 평생 고초를 겪은 인혁당 피해자들이 받은 국가배상금을 도로 뺏는 만행을 저지른 것도 독재의 영웅화에 방해됐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전두환이 1980년 광주민중항쟁에 개소리를 해댄 것도 이 맥락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권의 그런 기조에 방해가 되면 국가의 만행이나 잘못으로 자식 잃은 가족들도 범죄자, 돈벌레 취급하며 모욕을 줬다. 멀쩡한 노조를 억지스런 이유로 법외노조로 만들며 불법 단체 취급했다.

정당한 시위와 행진이 경찰 폭력에 가로막힌 것에 분노해 항의를 주도한 조직 노동자 지도자가 구속됐고, 반백의 노인이 살인 물대포에 목숨을 잃었다. 정부가 회피한 세월호 구조에 나섰다가 민간 잠수사들은 오히려 정부에게 과실치사 기소를 당했고, 한 잠수사는 구조 과정의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고는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렇게 돌아보니 박근혜의 구속은



박근혜 구속은 끝이 아니다 더한층의 사회 정의 실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의 작은 시작일 뿐이라는 점도 명백하다.

지배계급 다수가 박근혜 제거를 결심한 뒤로 곳곳에서 선긋기를 하고 있지만, 박근혜가 소중히 지키려던 것들까지 내다버리진 않는다. 재판은커녕 기소도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사면 얘기가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펼쳐지고 있다. 물론 지배의 안정성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지배자들 사이에서 통하는 의리일 것이다.

공소 유지

그래서 박근혜 일당의 수사와 재판도 주시해야 한다. 기소와 추가 수사, 유죄 판결까지는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

이미 정치적 단죄를 받은 박근혜이지만, 유죄 판결과 실행 집행까지 받아

야 지배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을 당분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박근혜의 유산을 청산하는 데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수 있다.

정권 실세 중 비구속자들 가운데는 황교안과 우병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세월호 진상 규명 방해 책동이 파헤쳐져야 한다.

뇌물을 제공한 나머지 재벌 총수들도 구속돼야 하고 뇌물죄임이 명시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노동개악과 고통전가 정책들이 통념상으로도 정당성 없다는 게 입증될 것이다.

문화계뿐 아니라 진보·좌파에도 적용됐을 게 틀림없는 블랙리스트 사찰 정치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민주적 권리들이 신장되려면 보안 사찰 기관들의 권력부터 약화되어야 한다.

앞으로 작성될 박근혜 공소장에 뇌물죄 혐의 등이 추가되면, 최순실 등의

기소 내용도 변경될 것이다. 더 많은 자들이 기소돼야 하고, 더 준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특검은 자신들이 기소한 김기춘, 조윤선, 이재용 등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인력과 재정이 줄고 추가 수사를 할 수 없어, 기존 수사 결과물만으로는 재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뇌물죄는 이재용과 박근혜 둘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므로 이재용은 사활을 걸고 재판에 임할 것이다.

특검의 공소 유지와 '박근혜 범죄단'의 유죄 판결을 받아 내는 데서 검찰 특수본의 추가 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자칫 특검의 구속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면 사회 정의의 실현은 그만큼 불철저해지는 것이다. 이에 고무돼 우익이 사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면 수

많은 대중이 절실하게 염원한 박근혜 적폐의 청산과 진정한 사회 개혁은 더 멀질 수밖에 없다.

세월호

세월호 인양 문제도 박근혜의 유산이 전혀 청산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다. 해양수산부는 박근혜가 파면되자마자 세월호를 인양했다. 그동안의 죄과를 박근혜에게 떠넘기고 면피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물론 신속한 인양으로 그동안 진실 규명을 방해한 주범이 박근혜였다는 정도는 분명해졌다.

그러나 그 뒤로 벌어지는 일들은 해수부 관료들을 포함해 더 폭넓은 세력들이 세월호 참사의 공범이었다는 점도 보여준다. 피해자 가족들을 이간질하는 공작정치가 가장 가증스럽다. 그런 작태로 그들이 얻으려는 건 결국 전체 훼손과 책임 규명 운동의 분열일 것이다.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이 부패한 관료들에게 힘을 보탰다. 폭포신향을 방문해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고는 눈물까지 글썽였다면서 황교안은 희생자 유가족들은 스치지도 않고 가버렸다. 3년 전 박근혜의 국회 방문이 떠오른다. 과연 박근혜의 공범답다.

세월호를 인양하게 만든 대중 투쟁이 계속해서 중요한 이유다. 기성체제에 목격한 압박을 가한 퇴진 운동의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곳곳에서 박근혜 유산의 집행자들은 난관을 겪고 있다. 검찰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 박근혜 구속영장에 삼성과의 뇌물죄 연관을 포함시킨 것도 한 가지 사례다. 무노조 삼성에서 삼성엔지니어링 노조가 결성돼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것은 또다른 사례다.

퇴진 운동의 다수를 이뤘고 이따금 집회 연단이나 행진차 연설을 통해 불평등과 부정한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던 노동자들이 움직여야 한다. 특히, 노동계급 고유의 경제적 힘(생산수단 가동에 차질을 빚게 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문재인 대세론이 뜻하는 바

문재인이 결선 투표 없이 더불어진 주당(이하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됐다. 문재인은 왼쪽에서 지지를 늘려왔던 이재명은 노골적인 우경화를 내세웠던 안희정에 근소하게 뒤진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둘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문재인 지지율이 더 크다. 특히, 당 대의원 득표에서 문재인이 몰표를 얻은 것은 민주당이 '문재인당'이라는 걸 새삼 보여 준다.

주목할 점은 문재인 대세론이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와중에 생겨났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까지도 문재인 지지율은 반기문과 얹치락뒤치락하는 20퍼센트대였다.

퇴진 운동 초기의 최대 수혜자는 퇴진 여론에 일찍이 힘을 실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 이재명 시장은 맨 먼저

공개적으로 박근혜 퇴진을 외쳤을 뿐 아니라 사드 배치 철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등 기성 정치인들이 꺼리는 주장을 거리낌없이 하면서 퇴진 운동 참가자들의 염원을 잘 대변했다. 반면 문재인은 단 한 번도 퇴진 운동을 선도해 대변한 적이 없다.

박근혜에 대한 증오심과 혐오감은 정권 교체 열망과 연결되므로, 지난해 9월 이후 제1야당인 민주당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했다. 최근 지지율은 50퍼센트에 육박한다.

그러나 문재인 지지율은 1월이 돼서야 30퍼센트를 넘겼다. 패마침 지지층이 겹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퇴해 당내 경쟁자가 줄고, 우파측 대표 주자이던 반기문이 사퇴했다. 운동이 정권을 격퇴하기 시작하면서 우파의 구심

이 약화되고 정권 교체 열망이 커진 것의 반영이다.

운동이 (그 성과와 한계 모두 포함해) 만든 지형이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즉, 문재인 대세론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결과물이지만, 그것이 옳은게 반영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필터(정치적 한계와 조건)로 걸러진 결과물이다.

따라서 썩 흡족하진 않아도 현재 대선 구도에는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여 박근혜와 새누리당 정권의 유산을 확실하게 청산하고 싶다는 대중의 염원이 놓여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권 교체 열망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오른 상황(문재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민주당 내부 세력관계와 결합되고, 또한 퇴진 운동의 부침과

한계가 결합돼, 결국 문재인이 득을 본 것이다.

최근 <미디어오늘>이 한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정권의 제1과제로 적폐 청산을, <동아일보> 조사에서는 '정권 교체를 통한 적폐 청산'을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

그러나 좌회전 신호 켜고 우회전한 노무현 정부의 재탕을 약속하는 문재인이 그런 염원을 충실히 대변하지는 못할 것이다.

안철수·안희정 등이 경제·안보 위기에 직면한 지배계급의 단결이라는 필요를 강조해 문재인이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듯도 하지만, 요즘 문재인은 왼쪽 껍박이도 확실히 꺼려하지 않는다. 대중의 기대치를 높일까 봐 몸을 사리는 것이다.

민주당 공식 후보가 되자마자 문재인은 현충원에 가서 이승만과 박정희의 묘역에 참배했다. 그 생물학적·정치적 후예를 자처한 대통령을 대중이 쫓아낸 지 채 한 달도 안 됐는데도 말이다. 물론 이재명과 안희정의 지지층을 최대한 흡수하려고 — "좌우로 벌려!" — 양쪽의 눈치를 어정쩡하게 보는 모양새는 계속될 것이다.

좌파는 선거를 간단히 기각해서도 안 되지만, 선거 그 자체보다는 유리해진 정치적 환경을 이용해 노동자 투쟁을 일으키려고 애써야 할 것이다. 퇴진 운동의 견인차였던 노동계급의 구실이 중요하다. <공산당 선언>에서 한 마르크스의 유명한 말대로 "기존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대선 후보들의 노동·일자리 공약 비교

박근혜 ‘노동개혁’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

19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퇴진운동의 결과로 조기에 치러지는 만큼, 야당 후보 대부분이 훗날 민심을 의식해 적폐 청산,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여보면 후보들 간 견해차가 상당하다. 특히 노동 정책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누가 짊어질지를 다루는 영역이므로, 노동과 자본 간의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대립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밀어붙인 것이 대표적이다. 낮은 임금,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으로 상징되는 ‘노동개혁’은 장기 불황 속에 기업주들의 이윤을 지켜 주려고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게 목적이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하에서 노동자들은 임금·노동조건이 후퇴하고 일자리를 잃는 등 고통을 겪었다. 박근혜는 특히 비정규직의 열악한 조건이 정규직 탓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노동자들 사이를 이간질하며 공격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정규직의 “파보호”를 깨뜨리던 정책들은 실제로는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을 끌어내렸다.

예컨대, 정부가 임금 삭감과 쉬운 해고를 위해 공표한 양대 지침(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변경지침’)은 무노조·중소영세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커다란 고통을 가했다. 이미 지침이 발표되기 전부터 임금 삭감, 임금체계 개악, ‘저성고파’ 퇴출제 도입 등이 잇따랐다.

물론 칼날은 유노조·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에게도 향했다. 공무원연금이 개악됐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가 도입됐다. 현대·기아차를 필두로 민간부문에서도 임금 인상이 억제됐고 임금체계 개악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밀어붙인 결과, 조선업에서만 7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고, 정규직·비정규직 할 것 없이 임금·노동조건이 크게 하락하기도 했다.

이런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첫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홍준표는 ‘노동개혁’을 적극 옹호한다. 진주의료원 폐쇄로 의료 민영화의 싹호탕을 쏘아 올린 그는 “귀족노조의 횡포”를 막아 경제 위기의 해법을 찾겠다며 ‘노동개혁’ 강행, 공무원 감축 등 구조조정 확대를 공약하고 나섰다.

탄핵 정국에 들어서 부라부라 박근혜 호에서 내린 바른정당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유승민은 박근혜 식 일방통행을 비판하거나 “비정규직 축소”를 말했지만 거의 알맹이 없는 텅서비스 수준이다. 위기의 대우조선을 매각(민영화)하자고 할 정도로 노동자 고통은 안중에 없다.

중도 보수층을 기반으로 대권을 꿈꾸는 국민의당 안철수는 “대안 없는 보수 세력의 구심점”이 되고 싶어 한다. 그가 ‘노동개혁’의 일부 정책 폐기를 약속하면서, 시장과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이유다.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의지를 드러낸 데서 보듯 성과연봉제 폐기 공약도 온전한 게 아니다.

우향우 하는 문재인

“정권교체의 필승카드”를 저처하는 문재인은 박근혜와 선을 두고 있지만, “확장성” 운운하며 빠르게 우경화하고 있다. 가령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면 데서 “점진적 인상”으로 후퇴한다든가, 2012년 대선 때는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절반(1.5권)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말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이 얼마나 부자 몸 조심하는지는 최근 양대 노총의 정책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한국노총에 대해서는 지각 답변을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노동자들의 기대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노동개혁’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첫째, 박근혜의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을 비판하지만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이 주되다. 그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데, 이는 노동자들에게 고통분담을 실향하겠다는 것이다.(이 점은 뒤에서 자세히 다룬다.)

둘째, 박근혜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말하며 정규직의 고용·임금·노동조건을 공격했다면, 문재인은 해고를 ‘최소화’하고 정규직 고용을 늘리되 임금·노동조건을 끌어내리라고 제시한 준다. 그가 내세우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뜻하는 바다.

몇 해 전에 민주당의 광주시가 주도해 만든 이 모델은 대기업 정규직노조의 임금 확대 전략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한 데서, 시장과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이유다.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1차 협력업체 수준으로 낮추고 3교대제·탄력근무제 도입 등 유연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를 조건으로 현대차와 같은 민간 대기업의 투자(공장 설립)를 끌어내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광주시의 구애에도 현대차가 꿈쩍도 하지 않은 데서 보듯, 기업의 투자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인건비라기보다 시장 상황, 판매 실적, 수익성 전망 등이다.

무엇보다 설사 투자가 이뤄진다 해도 그것은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

다. 금속노조가 지적했듯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반값 임금 공장”이다.

물론 자동차 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 임금·복지 수준은 여타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낫다. 광주시는 이를 “적정임금”으로 규정하고는 그런 공장이 만들어지면 더 열악한 비정규직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기존의 자동차 공장 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압박해 노동시장 전반에 하향평준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실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벤치마킹한 독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더구나 문재인이 법률상 해고요건을 강화하자는 노동계의 제안에 묵묵부답하고 ‘전체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그랬듯이 위기가 심화되면 해고를 위협하거나 비정규직을 늘리려 할 가능성도 크다.

한편,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나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후보는 ‘노동개혁’의 전면 폐기와 구조조정 반대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주류 정당들과 다르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 제1과제”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공약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대선 때와는 달리 독자 완주를 약속하고 있다.

다만 그가 대선 이후 연립정부 참여를 말하는 점은 우려스럽다. 문재인이 집권하더라도 그 정부는 심중팔구 얼마 못 가 노동자들을 공격할 텐데, 이럴 때 정권의 일부로 있다면 민주당 배신의 책임을 같이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주당 정부 밖에서 노동자 투쟁을 지지·교무하며 지지를 넓히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박설



박설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또 다른 일자리 창출 방안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한편에서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고통 받는 현실은 불합리하다.

현행법을 강제로 연장근무 시간을 주 12시간(최장 52시간)으로 제한하고 특례 조항만 없애도, 새로운 일자리 62만 개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더 나아가 실노동시간을 주당 48시간으로 제한하면, 일자리 1백5만 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효과를 내려면 임금과 노동조건 후퇴를 동반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한국의 노동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어떤 노동자들은 임금이 약간 줄더라도 노동시간이 단축되길 바라

고 이해할 만한 일이다. 특히 병원·자동차산업 등 장시간 교대제 근무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그럴 것이다. 실제로 장시간 노동은 제2의 발암물질로 불릴 만큼 육체·정신을 좀먹고 정치활동을 할 여두를 내지 못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이유는 부족한 기본급을 메우기 위해서이므로, 임금이 보장되지 않으면 편법적 연장근무나 투잡에 시달리기 십상이다. 또, 노동시간을 줄여도 노동강도가 강화된다면 일자리 창출의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문재인은 노동시간 단축 시기와 노동조건 후퇴를 동반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한국의 노동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어떤 노동자들은 임금이 약간 줄더라도 노동시간이 단축되길 바라

박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노동자들의 삶

임금 없는 성장

이명박근혜 정부 10년간 실질임금 하락
경제 성장률 + 물가 상승률 : 5.86%
명목임금 상승률 : 3%

치솟는 실업률

청년실업률: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전체 실업률: 7년 만에 최고
(조선소 밀집) 경남 실업률: 17년 만에 최고

더 열악해진 비정규직

한국의 최저임금: 프랑스의 절반
2012~14년 실질임금 인상률: 마이너스대 행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중: 오히려 증가
시간제 일자리: 41% 증가

문재인의 “노사정 대타협”론과 사회적 대화

문재인 후보 캠프는 “임기 내 우선과제 3가지”를 묻는 한국노총의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 임금격차 완화 등을 위한 “사회적 대화체계 복원”을 포함했다.

우선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법률도 무시하며 지침으로 노동 계약을 밀어붙이며 한국노총마저 등 돌리게 했던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태도다.

문재인 선거 캠프는 김대중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노사정 대화 체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주장한다. 물론 두 우파 정부 하에서 원활한 ‘사회적 대화’가 설 자리는 별로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김대중 정부 시절 추진된 노사정 대화가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것도 아니었다. 1998년 정리해고제와 파견법 제정이 포함된 당시 사회적 합의의 본질은 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 고통 전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 줬다. 문재인은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재인이 여러 주요 노동 현장에서 모호하거나 제한적인 입장을 취하는 점, 그리고 노무현 정부 초기에 노동자들이 “더 급하게 더 많은 요구”를 한 것이 문제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양 계급의 압력 속에서 노동자들 편으로 기울는 “사회적 대타협”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문재인이 사상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도출한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를 “재정 절감하고 노후소득을 지키는 적절한 연금개혁을 이끌었다”고 평가한 대목을 봐도 이런 점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캠프가 우호적으로 언급하는 독일 모델이나 노무현 정부가 시도했던 네덜란드 모델 모두 노동자들의 임금 양보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귀결됐다는 점도 눈 여겨 봐야 한다. 이미 문재인이 일자리 나누기 공약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을 전제하고 있다.

특히 장기화되는 경제 위기가 가하는 압력 때문에 일방한 개혁 조치에 대해서도 사용자들의 반발은 상당할 것으로 새 정부의 개혁의 여지는 더 좁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는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노동자들에게 회생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하는 구실을 할 공간이 크다.

이정현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 원으로!

박근혜 정부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박근혜는 지난 대선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 등을 공약했지만,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늘고 정규직 비중이 줄어들었다.

주류 야당 후보들도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고,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

특히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간제 일자리는 무려 41퍼센트나 늘었다. 그 일자리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4분의 1, 비정규직의 절반밖에 안 되는 저질 일자리라는 점도 드러났다.

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공격받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노동조건은 더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2012~14년까지 실질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대였고, 그 다음 해 약간 올랐어도 1퍼센트대에 그쳤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천4백70원(월 1백35만 원)으로 고작 7.3퍼센트(4백40원) 올랐다. 전년도의 8.1퍼센트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조선업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만 명이 지난 몇 년 새 소폭 없이 하고 되기도 했다.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 일단 비정규직 규모 자체를 대폭 줄여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기간제법에 사용사유 제한을 명시하고,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

주류 야당 후보들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안철수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에 유보적이거나,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하겠다고 해 정규직화가 아니라 사실상 무기계약화 확대를 말한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이 파견법 폐지는커녕 개정조차 말하지 않은 것도 한계를 여실히 보여 준다. 문재인은 그동안 민주노총을 비롯해 이재명·심상정 후보 등으로부터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런데 문재인이 한 말이라고는 고작 ‘성곽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거나 심지어 ‘정부의 선의가 기업들에 의해 약용됐다’는 변명뿐이었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를 맡

박설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너도나도 ‘일자리 대동맹’을 자처하고 있다. 일자리가 대폭 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청년실업률이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 준다.

그런데 1백만 명, 2백만 명이라는 규모 자체가 그 내용이나 실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도 ‘고용률 70퍼센트’를 공약했지만 전혀 달성하지 못했고, 그 내용도 낮은 임금의 저질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뜻했다. 일자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늘릴지, 그 질은 어떤가 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중요한 이유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 하는 문제다. 문재인과 심상정 후보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하자 우파들



사자만족

이 꾀대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공공부문 일자리가 너무 적은 게 문제다.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고작 7.6퍼센트로 OECD 평균(21.3퍼센트)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경제 위기 심화로 빈곤층이 증가하

고 노령화가 빨라지고 의료·보육·요양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그 필요성은 더없이 커지고 있는데 말이다.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인력이 충분해야 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여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선진화”, “경영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의 정원을 도리어 감축하고 외주화 등을 확대해 왔다. 적은 수의 노동자들이 더 많은 일을 감내하거나 비정규직 일자리로 대체된 것이다. 지난해 구의역 참사를 비롯해 철도·지하철의 잦은 안전사고, 우체국·사회복지노동자들의 잇따른 파로사 등이 빚어진 이유다.

우파들이 탄축을 거는 대표적 논리는 재원의 문제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 가면 간단하다. 국내 30대 대기업의 사내

박설

수서고속철도(SR) 개통 1백 일

‘경쟁’ 핑계로 인건비 삭감, 외주화 확대 말라

백은진

3월 18일 수서고속철도(이하 SR) 개통 1백 일을 맞았다. 국토부와 보수 언론들은 SR 개통으로 철도 경쟁체제가 시작됐고, 경쟁이 코레일의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주장한다. 코레일이 KTX 마일리지 제도를 부활시키고, 서울역에서 호남선을, 용산역에서 경부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 SR 개통 덕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개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애초 코레일은 SR 개통 전에 일시적으로라도 KTX 요금을 인하해 보려 했다. 그런데 국토부가 요금 인하는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부활시킨 것이었다. 즉, 국토부가 SR에 경쟁력을 확보해 주려고 KTX 요금 인하를 막아 승객들이 피해를 본 것이다.

또한,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경부선과 호남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 것도 코레일과 SR의 경쟁이 낳은 효과라고 보기 힘들다. 경부선이나 호남선을 타려는 사람이 수서역 근처에 산다면 그는 가까운 SR을 이용하려 가지, 서울역이나 용산역까지 와서 코레일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용 절감 압박

실제 SR 이용객의 84퍼센트가 접근하기 편리해서 SR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대다수 이용객들은 가까운 역의 열차를 이용하는 것이지, 코레일과 SR 가운데 경쟁력 있는 철도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SR 개통이 코레일에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는 빌미가 된 것은 확실하다. SR 개통 이후 코레일의 KTX 이용객 수는 SR 개통 전보다 하루 평균 1만 8천 명 정도(약 10퍼센트) 줄었다. 이를 두고 코레일 사장 훈순만은 SR 개통으로 연간 매출 4천억 원이 줄어든다며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매일경제〉3월 28일자 인터뷰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SR 열차 32대 가운데 22대가 코레일이 사용하던 KTX를 빌린 것이어서, 코레일의 열차 공급이 줄어 생긴 손해다. 오히려 전체 철도 이용자 수는 최근 수년간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런데도 코레일 사측은 SR 개통을 빌미로 철도 노동자들에게 비용 절감, 특히 인건비 절감 압박을 강하게 가하

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외주화를 대량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사측은 상반기 내에 열차정비 분야에서 2백61명, 전기 분야에서 2백21명, 시설 분야에서 2백26명을 외주화하겠다고 나섰다.

수도권·부산·호남 철도차량정비단의 외주화 비율은 이미 각각 20, 49, 42퍼센트나 된다. 그런데도 사측은 수도권정비단의 경우 외주 비율을 53퍼센트까지 높이고 최종적으로는 75퍼센트까지 확대하려 한다.

게다가 이미 코레일의 외주 인원은 2010년 6천9백83명에서 지난해 8천1백96명으로 늘었다. 이 과정에서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사고도 늘어났다. 2011년 인천공항철도 5명 사망 사고, 2016년 김천역 2명 사망 사고는 모두 외주화로 말미암은 인재였다.

고속열차는 한 번에 1천 명 넘게 타고, 하루 2백50여 회 운행하며, 시속 3백 킬로미터를 넘게 달린다. 고속열차 구간의 75퍼센트는 교량과 터널로 이뤄져 있어 열차 정비와 선로와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가 열차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코레일은 비용 절감을 위해 열차 안전은 내팽개치고 있다. 가령, 철도의 전기시설물 유지보수는 열차가 다니지 않는 야간에 작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코레일 사측은 인건비를 줄이겠다며 야간 정비 인원을 2백77명, 약 13퍼센트나 줄이려 하고 있다. 승객의 생명과 인건비를 맞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 이후 민영화 추진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2월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2016~2020)”을 발표하며 민영화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SR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민영화로 가는 길

SR이 1백 퍼센트 공적자금으로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SR의 공공기관 지정을 벌써 여러 해째 반대하고 있다.〈뉴시스〉3월 29일자

이는 차후에 SR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할 계획이기 때문일 것이다.

가령, KTX의 수익은 무궁화호 같은 일반 열차의 적자를 메우는 데 쓰여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SR은 공공



사진 출처 한국철도시설공단

민영화로 내달리는 철도에 제동을 걸자

기관이 아니므로 그 수익은 철도 공공성을 위해 쓰일 수 없다.

따라서 코레일과 SR을 통합 운영해 철도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는 철도노조의 주장은 전적으로 옳다. 코레일 사측이 SR 개통을 빌미로 인건비 압박 구조조정을 가하는 데 맞서 싸우는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이 그들의 임금과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사측은 3월 27일부터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지난 파업 기간에 채용한 기간제 기관사들의 계약을 연장하며 정규직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비정규직으로 메우고 있다. 이는 운전 분야에도 공세적인 비정규직 확대가 시작됐다는 뜻이다.

또한, 수도권 전동차 열차승무원 노동자들의 경우, 근무일정표(일명 다이아)가 개악돼 더 오랜 시간, 더 강한 강도로 일하게 됐다.

이에 맞서는 것은 철도 노동자 자신의 임금과 노동조건뿐 아니라 철도 공공성을 지키는 데서 중요하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철도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트럼프의 대북정책
중국을 견제하며
대북 압박 강화를 예고하다

★ 한미FTA 5년이 남긴 것

★ 스웨덴 징병제 부활
북지국기도 제국주의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

★ “(가칭)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사회적 총파업
공동행동” 출범

★ 4·15 교육주체 결의대회
교육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다

★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하라

★ 이주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단속·추방 중단하라

★ 파키스탄 정부의 사회주의자 탄압
레이아즈 아마드 박사를
즉각 석방하라!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파업대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융·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중고등학교 | ☐ 기타) _____

[선택] 휴대전화번호 _____

회비납액(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노동자 연대〉는 마르크스주의로 세계를 분석합니다.

- ▶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자 연대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신문
- ▶ 차별과 억압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
- ▶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논쟁적인 신문
- ▶ 국제적 저항과 운동 소식을 좌파적 관점에서 전하는 신문
- ▶ 저항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신문
- ▶ 독자들이 판매자이자 기고자이고 후원자인 신문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26개 호) 5만 원, 2년(52개 호)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티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구독기간 ☐ 1년 (26개 호) 50,000원☐ 2년 (52개 호) 100,000원☐ 2년 이상 ()년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보내 주세요.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 ws@wspaper.org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세월호 인양

김지윤

박근혜가 구속되던 날 마침내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도착했다. 육지 가까이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는 부식되고 여기저기에 구멍이 뚫린 모습이었다. 지난 3년 가까운 침몰의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많은 사람들은 인양을 시작으로 미수습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가고, 아직 밝히지 못한 침몰의 원인 등을 밝히기를 염원하고 있다.

그런데 해수부의 태도는 좀처럼 미덥지 않아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육상 거치 불투명 소식이 흘러나와 유가족들은 다시 가슴을 치고 있다. 4월 3일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 무게(1만 3천4백70여 톤)가 너무 무거워 장비에 실을 수 없으니 물을 빼내야 한다고 구명들을 뚫겠다고 발표했다. 비용 절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원하는 수준으로 배수가 되지 않자 장비 추가 투입을 곧 결정하겠다고 한다.('악의가 없다'며 해수부 계획에 동의한 선체조사위도 문제다.)

해수부는 인양 과정에서 좌현 램프(화물이 오가는 입구)를 제거했는데 <뉴스타파>는 이미 수중소나영상을 토대로 좌현 램프가 열릴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선체에 뚫은 구멍을 막아 둔 유실 방지망도 5센티미터 가량 벌어져 있었다.

유해 발굴을 위한 체계도 제대로 꾸려 놓지 않았다. 유해 감식 전문가가 동승하지 않아 동물 뼈를 미수습자 유해로 착각하는 일도 벌어졌다. 대체 지난 2년 동안 뭘 했는지 분통이 터진다. 국방부가 관련법상 어렵다며 유해조사단 투입을 처음에 거부한 것도 과연 지금 정부가 미수습자를 찾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의심케 한다.

왜 이토록 인양 준비가 부실했나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태도는 냉담과 무시, 분열 시도였다. 세월호 참사 전 과정에서 보인 야비함은 박근혜가 대중적 증오를 받으며 쫓겨난 이유 중 하나다. 전 민정수석 김영한의 업무수첩에는 이런 메모들이 남아 있다. "시신 인양X, 정부 책임, 부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박근혜 정부의 사악함을 온 천하에 드러낼 것이고, 세월호 인양은 대중의 공분을 크게 자극할 것이었다. 그래서 인양을 회피했던 것이다. 지난해 11월 박근혜 퇴진 운동 초기만 해도 해수부는 '연내 인양 불가' 입장이었다.

박근혜가 2015년 4월 인양 선언을 한 것도 3월 쓰레기 시행령 항의 투쟁이 부상하자 대신 내놓은 양보책이었다. 수중 수색 종료를 선언한 후 무려 5개월이나 시간을 끈 뒤였다.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 안전을 희생한 이윤 논리가 있었는데도 정부는 여



끝나지 않는 방해와 갈라치기
재욱이 엄마 홍영미 씨가 목포신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로 철망 밖에서 세월호를 바라보고 있다(위) 포옹하는 재욱이 엄마 홍영미 씨와 미수습자 다운이 엄마 박은미 씨 (아래)

그런데도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은 최근에 목포에서 미수습자 가족만을 만난 채 황급히 떠났다. 해수부는 희생자 가족들이 "당사자가 아니다" 하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대며 목포신항 컨테이너에 상주할 수 없다고 했다. 인양 목적은 미수습자 수습이므로 선체 조사를 요구하는 다른 유가족들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지난 2년 넘게 미수습자 수습과 책임 규명을 함께 요구하며 싸워 온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이다.

전히 돈을 앞세웠다. 인양 업체 선정 기준도 기술이 아니라 낮은 비용이었다. 이는 정부에게 인양 의지가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짝깁 바지선을 이용한 방식(현재 성공한 방식)을 내놔는데도 유일하게 리프팅빔 방식을 제시한 상하이 샬비지가 선정됐다. 그 결과 인양은 거듭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1백40곳에 구멍이 뚫리고, 선체가 찢어졌다. 육상 거치 과정에서도 이런 상황은 반복됐다. 해수부는 "비용"을 근거로 장비 추가 투입이 아닌 구멍 뚫기를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8월 특조위 예산에서 수중 촬영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특조위의 인양 현장 조사는 번번이 거절당했고, 유가족들은 멀리 동거차도에서 인양 과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우익 일부가 인양 후에도 세금 낭비



수향여행이 끝나고 금요일에 돌아오겠다던 세월호는 1081일이 지난 금요일에 돌아왔다

운운하는데 사실 이 주장의 원조는 박근혜 정부다. 이 정부는 노골적으로 "세금 도둑" 운운하며 진상조사기구인 특조위를 공격했다. 정작 '최순실 예산'에는 수십~수백억 원을 배정해 놓고서 말이다.

정부는 틈만 나면 부풀린 배보상 액수를 언론에 흘리며 유가족들을 모욕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이나 서해 웨리호 침몰 희생자들과 비교해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배보상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게다가 세금은 이런 일에 쓰라고 있는 것이다.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체 조사, 수사방해 조사 등 세월호 책임

규명을 하고, 국가의 방기 속에 죽어간 희생자들에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해수부는 박근혜가 파면되자 서둘러 인양에 착수했다. 어떻게든 박근혜에게 책임을 떠넘겨 면피해 보려는 속셈과 선체조사위원회가 정식으로 꾸러지기 전에 인양을 시작해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이끌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말로만 인양을 떠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번번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어이없게도, 해수부가 느닷없이 진상 규명의 한 주체처럼 행세하지만, 해수부의 고위 관료들은 책임자 처벌의 대상이다.

유족과 미수습자 가족을 갈라치기 하는 정부

선체를 절단하겠다는 해수부의 계획은 위험천만하다. 선체 절단 과정에서 유해가 함께 절단되거나 용접기구 열에 녹을 수 있다. 선체가 뒤집어져 침몰했고, 물살 속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시신 위치를 객실부에서만 한정할 수도 없다. 분리 과정에서 화물이 쏟아져 객실부가 훼손될 위험도 있다.

화물칸 사이를 철재가 아닌 천막으로 대충 막았다는 세월호 선원의 양심고백이 있었던 만큼 화물칸 조사도 필요하다. 화물 과적,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과적도 확인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조타실과 기관실을 연결하는 전기·파이프 배선 등이 잘려나 가면 기계 결합 문제를 조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교활한 시도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활동한 이호중 교수는 선체조사위 권한에 대한 미수습자 가족의 자문 요청에 "해수부의 수습과정 전반에 직접 개입하여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감독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당부했다. "미수습자의 유해가 발견된 위치라든가 발견 당시 유해의 상태 및 유해 주변의 여러 상황들(화물의 배치 등등)은 그 자체가 침몰 원인 조사에 중요한 정보이며, 미수습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조사하는 것 또한 진상조사의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수습 과정과 선체 조사는 분리될 수 없다. 수습은 동시에 조사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계속해서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조사를 대립시키는 것은 운동을 분열시키려는 교활한 시도다.

박근혜 정부는 참사 직후부터 '순수 유가족' 운운하며 유가족들을 분열시키려 했다. 김영한 업무수첩 속 "세월호 유가족(학생 유가족) 외 기타 유가족 요구는 온건 합리적. 이들 입장 반영되도록 하여 중화"라는 메모가 이를 뒷받침한다. "박근혜, 김기춘, 청와대는 피해자들을 다른 의도가 있는 사람들로 취급해 왔는데 박근혜가 파면돼도 이런 태도는 그대로다."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오마이TV 인터뷰)

박근혜 퇴진 운동의 여파 속에서 검찰은 '법꾸라지' 우병우의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을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분열 시도를 막고, 유가족들의 정당한 요구들을 온전히 이루려면 세월호 운동이 정부에 맞선 투쟁을 전진시켜야 함을 보여준다.